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전망¹⁾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3월 31일
- 연사 : 문정인 동북아시아위원회 위원장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인사말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사회자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포럼장에 오셔서 느끼셨겠지만, 명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탈 권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자연스러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좌석에서 오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마음놓고 토론을 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선 현대경제연구원 김중웅 원장님으로부터 개회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1) 본 자료는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임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김중웅입니다. 오늘 중앙일보와 저희 연구원이 각계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을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들어서 동북아 정세가 매우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단순한 지역 협력차원이 아닌 21세기 한반도에 명운을 결정한다는, 보다 복합적이고 새로운 측면에서 동북아 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 경제의 급성장은 지금 당장은 한국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중국 경제에 대한 우리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중국에 양적으로 종속되는 결과가 빚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개도국 경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실금융이나 빈부격차 문제, 부정부패와 같은 여러 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중국 역시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국발 경제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런 가하면 동북아 지역 정치, 경제 발전에 주도권을 잡으려는 주요국들의 패권주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동맹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정치 군사 대국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토대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쏘방위 대국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권주의와 함께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민족주의 대두에 의한 국가 간에 갈

등이 깊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한·중·일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전쟁과 식민지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과거 역사 청산이 깨끗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지금 한일 간 벌어지고 있는 독도분쟁도 바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는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적 연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패권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로 갈등과 대립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북핵문제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한국 21세기 생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포럼은 한국의 장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찾는 '책임있는 지식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역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거점이 될 수 있으며, 역사 발전적 측면에서는 동북아의 양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조정자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융합하는 촉매자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전략 여하에 따라 21세기 동북아 시대는 한국의 시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출범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이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정책 선도 포럼'으로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권영빈 중앙일보 사장

바쁘신 가운데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창립모임에 발제자로 참석하신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남북관계, 북한, 중국, 일본 정세를 비롯한 동북아 전반의 움직임과 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현대경제연구원과 더불어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이유는 그 첫 번째, 북한의 핵문제가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난달 핵문제 보유 선언을 하면서 2002년 10월에 불거진 북핵 2차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6자 회담의 틀을 통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차 포럼의 주제를 북한 핵문제와 동북아 정세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의 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입니다. 독도와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한중간 마찰은 동북아의 상생과 협력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의 역사 인식을 놓고 날카롭게 대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대륙의 양안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인대에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 「반국가 분열법」을 통과시키면서 양안관계 또한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부시 2기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지 주목되는 바입니다.

저희 본사는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문정인 박사께서 참석하셨으니까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먼저 오늘 포럼의 발제를 하실 분과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라고 했습니다만,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토론자이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두 분을 따로 모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 위원장님께서서는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가 필요 없을 듯 합니다만,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문 위원장님은 연세대학교 정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작년 말까지 미국 국제정치학회의 부회장도 맡으셔서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또 문 위원장님께서서는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대북 정책 입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지금도 참여정부에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송위원장님께서서는 시라큐스대 조교수를 거치셔서 산업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등을 역임하시다가 95년부터 아시아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원장님은 영국대사관, 미국대사관에서 근무하셨고 외무부 구주국장, 또 국가안전보장사무처 차장 등을 역임하시다 2004년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문 위원장님께서 발제를 하시는데 짧게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모두 전문가들이시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대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실 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짧게 하시겠다고 저에게 전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주제 발표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

동북아시대 위원회의 두 가지 큰 구상은 동북아 경제 중심과 안보 분야의 동북아 협력 구상임

무엇보다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주신 김중웅 회장님과 권영빈 사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어진 주제가 '북핵 문제와 동북아 정세 전망'입니다.

제가 동북아시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동북아시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개의 큰 구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북아 경제 중심 개념이죠. 그래서 서울에 금융 허브 만들고 인천, 광양, 부산에 물류 허브 만들고, 개성에 제조업 허브를 만드는 앞으로 20년, 30년 후 돼서 동북아 경제권, 열려진 동북아 경제권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 하는 일종의 변영전략이 동북아 경제 중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위원장을 맡은 후부터 많이 강조하는 것은 동북아 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안보 분야에서 어떻게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느냐,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부분인데, 특히 동북아 협력구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북핵문제인 것 같습니다.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도 어렵고, 동북아 전체도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간에서 북핵

북핵 문제는 동북아 경제 협력 구상의 최대 난제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북핵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북핵문제의 요체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는 우선 핵탄두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delivery vehicle)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사일이겠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분명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 실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탄두, 미사일, 실험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북한이 핵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판단 기준은 핵 탄두 보유, 탄두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테스트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이것을 각론적으로 보면 탄두를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탄두도 기본적으로 과거의 탄두, 현재의 탄두, 미래의 탄두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탄두라고 하는 것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이전에 북한이 1~2개 개발해 놓았을 지도 모르는, 소위, 아주 조잡한 수준의 원자탄을 보통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보통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했다면 94년 제네바 합의는 타결이 안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핵문제라고 하는 것은 플로티늄 원자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변의 5메가 와트짜리 흑연 감속로에서 생산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뽑아내서 원자탄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상 2002년 10월 농축 우라늄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5메가 와트 원자로에서 추출한 8천개의 폐연료봉을 수조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미국간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엔 이것을 북한이 재처리했다는데 지금 통계에 따르면 2천5백개에서 많으면 4천5백개까지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 그러면 거기에 뽑아낼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보면 한 3~4개 많으면 5~6개까지 핵탄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플루토늄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의 2차의 북핵

미국도 북한이 이
미 4개정도의 핵 탄
두를 보유하고 있
을 것으로 파악하
고 있음

위기가 나온 바로 기본적인 원인인데 그것을 미래의 핵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핵문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나, 앞으로 4~5년 정도 있으면 갖게 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게 바로 고농축 우라늄 문제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4개정도의 증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파키스탄에서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1,500개 이상 가져갔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원심 분리를 가져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려고 하면 고강도 알루미늄 관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러시아에서 사가지고, 독일에서 사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는 사실도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키스탄 원자탄의 아버지라고 하는 A.Q.Kahn박사의 증언, 그것은 미국이 직접 신문한 증언이 아니고 파키스탄 정보 당국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 결국에 고농축 우라늄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위, 그 기자재를 가져갔다고 알려졌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아티클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겁니다만, 이게 고농축 우라늄을 하려고 하면 옐로우케이 우라늄을 가져서 그것을 가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핵사플로라이드라고 하는데 핵사플로라이드를 리비아에 뉴욕타임즈 아티클에서는 직접 유출했다, 최근에 워싱턴포스트 아티클은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그게 리비아 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고농축 우라늄탄에 북한이 관심이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농축 우라늄은 분명히 북한이 그것을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고, 관련된 기자재들을 확보해 놓은 것은 분명한 거고, 그것이 94년 제네

바 기본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고농축 우라늄탄을 가졌느냐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핵탄두에서 하여간 과거나 미래 핵은 모르겠지만, 플루토늄 탄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은 이미 핵탄두 생산 능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북한은 핵 탄두 생산 능력과 함께 핵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기술도 보유하고 있음

그 다음에 미사일 능력인데 대포동 1호는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포동 1호로 해서 대륙간 탄두 미사일로 간주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예측성과 안정성을 가지려고 하면, 실험을 보통 열다섯 번 이상해야 된답니다. 첫 번째 실험인데 그 자체에서 컨트롤페일리어, 그러니까 미사일 통제 실패가 되었기 때문에 대포동1호는 성공한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1,000~1,500km 정도 갈 수 있는 노동1호, 2호에서는 북한이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루토늄탄 능력하고 그 다음에 소위 중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실제로 테스트링 과정을 거쳤는지는 불투명함

세 번째 테스트는 아직 안 했습니다. 뭐 고폭 실험을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험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히 북한이 핵 국가로서의 가능성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탄 문제, 지금 8천개 폐연료봉 재처리하는 문제를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상당히 북한이 얘기한 대로, 소위 핵무기를 전부 늘릴 수 있다고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 핵을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최소한 세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선 한반도 평화구축이 어려워질 겁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공존 체제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큼

니다. 우선 북이 핵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에서 북에 대해서 우세하다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반도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해온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체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을 때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변수입니다. 일본은 거의 지금 플루토늄 50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금력, 기술력 그 다음에 원자탄이 필요한 모든 기자재 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할 것 입니다. 국제적인 제약도 많고, 미국의 저항도 많고, 일본 내부의 저항도 많습디다만, 만약 북이 계속 핵무기를 가져서 핵무장을 해나갔을 때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분단된 한반도에서 한국도 그것을 피해 나갈 수 없고, 대만도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쥬.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디다.

참여정부도 기본적으로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마지막으로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쥬. 글로벌 시큐리티, 세계적 차원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물질이 제3국 또는 제3의 테러리스트 조직 같은 데 나갔을 때, 이것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대한 테러 공격의 하나의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디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의 핵문제라고 하는 게 한반도의 안보, 동북아의 안보, 전 세계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 참여정부도 기본적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북한에게 핵 야망을 추구하든지 경제적 생존을 채택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하는 게 우리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핵문제의 해결

미국과 북한의 깊은 불신의 골로 인해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

방향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토론의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발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자회담의 틀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 있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불신의 깊이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협상을 통한 타결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북한을 믿지 못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검증 가능한 사찰을 통해서 불가역적인 해체를 했을 때만이 북한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해 줄 수 있고, 그것에 따른 상응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의 입장은 미국이 우리보고 무장해제 하라고 해서 완전히 해체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동시 행동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핵 포기를 선언하고 할 테니까 당신들도 우리에게 대해서 안전보장을 약속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행동 대 행동해서 우리가 동결시키면 동결에 따르는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검증 가능한 사찰을 했을 때의 보상 그리고 불가역적인 해체에 들어갔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향후 북핵 문제는 평화적 타결, 장기화, 위기 상황 표면화 등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함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까지 북이 핵을 갖겠다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해왔는데 어떤 조건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북을 못 믿으니까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북핵 문제가 전개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우선 평화적 타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미국도 좀 유연한 대북 입장, 소

위 폭정의 전초기지다, 이런 표현도 덜 쓰면서 그 다음에 결국 북한 핵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타결해야겠다고 하는 미국 지도자의 강한 의지를 통해서 미국이 소위 유연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이죠. 북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과거 같은 벼랑 끝 외교라든가,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에는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자,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6자 회담이 활성화가 될 거고, 거기에서 결국 동결, 검증 가능한 사찰, 그 다음에 불가역적인 해체, 이 과정을 겪게 된다면 사태가 상당히 좋아질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악의 축으로 분류하고 있어 북핵 문제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게 이 가능성도 배제 못 하겠죠. 미국에서 요즘 그런 비관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결국엔 미국이 제일 희망한 것은 자유의 확산, 민주주의의 확산인데 그리고 북을 악의 축이라고 불량국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부시 행정부가 그런 국가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협상에 대한 협상 회의론들이 상당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 북한의 체제적 성격을 봐서 북한하고 협상하기 어렵다, 반면에 군사적 행동을 하기에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라크에서 지금 판을 벌리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협상도 어렵고 군사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는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현 고착국면의 장기화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은 그 기존의 특히 플루토늄을 통한 그 핵 능력을 이전보다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제재하기 어려운 입장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북핵 사태의 장기화, 그 다음에 북이 그렇

게 되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협상은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걸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겁니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면 결국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존재함

그 다음 세 번째 가능한 것은 현 타결 국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위기 국면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가령 금년 6월 정도까지 북한이 4차 6자회담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특히 일본의 강경 구도로 봐서는 일본 같은데서 4차 회담도 나오지 않고 이제 6차 회담은 끝났다, 유엔 안보리로 회부를 하자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로 북한 핵 문제를 회부하려고 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를 가야 합니다. 국제원자력 기구 가서, 비엔나 가서 거기 이사회에서 권고를 받고 그리로 회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9월 정도 되면 그 다음 9월부터 12월 사이 미국 유엔에서 총회가 열리고 하니까 그때 회부가 되면 11월, 12월 되면서 안보리 회부가 되고, 안보리 회부가 되면 거기서 하는 게 우선 1차적으로는 의장 성명이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94년 사례를 보면 안보리 회부 자체를 북한은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위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전쟁으로 꼭 이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의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는 상태에서 결국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를 가져 올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 드려봤습니다. 하나는 평화, 즉 외교적으로 타결하는 것, 두 번째는 협상의 장기화, 북한의 핵 보유 기정사실화 시나리오, 세 번째는 한반도 위기 고조 시나리오 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북핵 전망 시나리오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북핵 문제가 평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교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동북아 안보체제를 상당히 경색시킬 것으로 판단됨

우선 평화 외교적으로 타결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그럴 경우에는 6자회담 자체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자체뿐만 아니라 6자 정상회담, 6자 외무장관 회담, 6자 국방장관 회담과 같은 다자간 남북회담 체제로의 전환이 상당히 쉬워지면서 우리 동북아에도 유럽과 같은 결국에는 하나의 협력과 통합의 질서가 생겨나는 결정적인 모멘트가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북핵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북아 안보 체제도 상당히 경색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에 3국의 선택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중국, 러시아의 선택도 어려워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강화시켜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신 냉전 기류가 생겨날 수도 있으면서 동북아의 전략적 불안정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여기에다 가령 일본이 우선 해야 될 것은 핵 갖기 전에 해야 할 것은, 평화헌법 구조를 바꾸는 문제, 그래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고 정규군을 갖는 국가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핵무장까지 한다고 하면 동북아의 전반적인 질서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북한 핵이 가져오는 파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강구해야겠습니다만 당연히 예방 외교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 가능 개연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

북한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핵 보유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스스로 핵도 갖고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선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미 3차 6자 회담 때, 하여간 어떻든 간에 미국이 제안을 내놓았고, 이제 북한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그게 화답이 되던,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답이 되던 답을 줘야 할 때고, 그것은 4차 6자 회담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야말로 지금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미국도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여 북한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야 함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북핵 문제, 미국도 분명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중요한 것은 핵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된 다음 다른 대량 살상무기, 인권문제, 재래식 무기 문제를 들고 나와야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엔 북한입장에서 볼 때는 협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초강대국이지만 그래도 특정 국가와 협상 할 때는 그 국가의 입장도 헤아리는 접근 방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전략적 선택이 매우 어려운 위치에 서 있음

한국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북핵 문제는 북한의 생존만 위협하는 게 아니고, 남북한 전체,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안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북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우리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지혜를 만들면서 그래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가져가는 길을 모색했을 때, 핵 문제도 저는 전향적

으로 그 해답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이 지금 남쪽하고 당국자 회담도 안 하는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도 진짜 남북한 관계를 포함해서 결국 동북아 전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다고 하면, 전향적으로 나와서 우리하고 많은 것을 얘기하고, 공동의 지혜를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경제 쪽에 제가 코멘트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왜 동북아 경제 중심인가, 경제 중심이라는 말을 쓰다가 요새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섭섭한데 경제 중심이라는 말이 으뜸이라는 말도 있지만, 교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류 중심 국가이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누가 봐도 네덜란드는 유럽 경제의 중심 국가입니다. 말하자면 장터지요. 그래서 동북아의 5일장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마켓을 한번 건설해 보자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십 몇 년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중심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왜 경제 중심인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세월동안 자존을 지키고 산 때가 광개토대왕 그리고 몇 기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자존을 못 지키고 살아 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존해 갈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은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는 생존과 자
존의 문제로 생각
해볼 수 있음

동북아 중심 국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와 지식기반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수적임

지식서비스 기반 확
충을 위해서는 교
육,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보다 활발
한 개방화를 통해
선진화되어야 함

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고 현재도 아직은 모방기술이 살아 있어요. 전자도 아직 모방이고요,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아직도 모방 기술이 효자노릇을 아직은 하고 있는데 7-8년 후나 1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천기술로 가야 되겠지요. 20세기 초반은 화학, 물리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이고, 20세기 후반은 컴퓨터하고 인포메이션이고, 21세기 50년은 BT입니다. BT로 해서는 IT, BT, NT, MT가 다 퓨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BT가 세상을 리드할 거라는 말은 아직도 몸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니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효자 노릇하는 네 가지 섹터를 업 그레이딩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빨리 원천기술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미국의 각지 R&D센터를 제가 쪽 조사를 했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R&D센터 분원을 한국에 두 세 개 유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원천 기술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지식기반의 서비스업입니다. 이것을 말로는 많이 하시는데 지식기반 서비스를 해서 수출을 할 수 있어야겠다. 지식기반 서비스가 뭐냐? 다 아시겠지만 금융, 물류, 법률 서비스, 관광, 레저 문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전공하신 분들이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같이 해야 됩니다. 영어가 안 되고는 서비스업을 수출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교육, 중국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육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자유지역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학교 분교를 유치하고, R&D 분원을 유치함으로써 기존 대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 촉매 역할을 해야겠다, 이것이 동북아 문제의 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육 특별법이 아직 안 되어서 작년 6월 달에 국회에 가서 그대

- 로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 동북아 지역의 협력 체제 강화를 위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
- 두 번째는 우리가 자존의 문제입니다. 동북아 한, 중, 일 3국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계경제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20년 변화가 되는 1/3을 차지합니다. 세계경제의 1/3을 차지하는 이 3개국이 공동체나 협력체를 안 만들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만들어진다, 그럴 때 이 공동체 구성을 주선할 사람이 누구인가, 프로모터가 누구냐, 큰 나라는 못 합니다. 한국은 크지도 않으면서 적당히 작으면서 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프로모터 역할을 하자, 즉 간사 역할을 우리가 맡자, 간사를 맡으면 우리가 동북아의 회장, 부회장은 할 수 없지만, 간사를 맡으면 회장, 부회장이 무시를 할 수 없다, 무시하면 점심을 굶게 스케줄을 짤 수 있는 게 간사입니다.
-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이 전제 사항임**
- 그래서 우리가 간사국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동북아의 균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균형자론을 주장한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 물류, 관광, 금융 등 동북아의 균형자의 역할과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유럽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이 균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U의 헤드쿼터가 브뤼셀에 있다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동북아의 공동체가 생길 때 헤드쿼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미리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와 자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가서 7년 있어 봤는데, 대학 개혁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 가까이 정책을 많이 다뤄본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외국의 우수한 대학의 분원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들이 일류로 운영될 때, 이에 국내 대학들도 자극을 받아 한국 교육

이 한 단계 향상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기회와 위협 요소로 작용

(한태규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동북아 문제, 동북아 미래의 문제에는 지금 여러분께 토의하는 과정에 나왔지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이 과연 동북아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만 또한 우리에게 상당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아마 동북아 미래 논의의 초점이 지금 현재 맞추어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석유를 비롯하여 각종 원자재를 둘러싼 경쟁도 있고, 또 중국의 경제 성장은 중국의 군사력 확충으로 이어져 주변국에게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월남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이해상충에 갈등 양상 뿐 아니라 상호 협력의 움직임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

중국과 중국이 우리의 경계의 대상이냐, 아니면 협력의 대상이냐 또 과연 중국의 실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동북아 미래의 명암을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은 동아시아 지역처럼 어두운 면만 있지 않고, 협력의 움직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동북아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작년 우리가 주도한 동아시아 스터디 그룹이나 동아시아 미래 포럼 등을 통해 협력을 열어가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동아시아 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아시아의 발전의 미래를 밝게 개척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기운을 살리고, 위협요인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동북아 미래를 열어 가는데 초점이라

-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향후 동북아 지역 문제 논의의 핵심 사안이라고 판단됨** 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위협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입니다. 문위원장님께서 북한 핵 문제를 설명하시면서 주로 미국 중심으로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중국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중국의 장래에 동아시아에서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 위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더불어 동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두 번째는 지금 동아시아 지역 또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의 기운이 있는데,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가면서 주로 동북아 협력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한·중·일 3국 간의 협력이 정착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보이는데 반해서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은 ASEAN +3 협력과 동아시아 정상 회의 등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동북아 협력과 동아시아 협력을 어떻게 병행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동북아시아대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인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저의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없는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적음** (문정인 동북아시아대 위원장) 송희연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태규 원장님 하신 것, 두 가지 중국의 역할, 그 다음에 동북아 협력 구상하고 동아시아 공동체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선 후자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가서 동남아시아 구상을 가서 발표를 하는데, 일본 분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동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만 동북아로 가느냐, 시대 역행적이고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와 동아시아 지역 협력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 동일한 문제로 판단됨

퇴행적이라고 하는데, 나카소네 전 총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중·일 3국 협력 없는 동북아,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전부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회지역주의 하고 있지 않느냐, 아세안 플러스 차이나, 아세안 플러스 재팬, 아세안 플러스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결국은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없으면 동아시아 공동체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중, 일 3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하고 동북아 공동체 구상은 서로 상치되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북아 공동체가 잘 되면 특히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잘되는 것이고, 거기에 러시아, 북한, 몽고가 참여해서 잘 되면 이게 동아시아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어 보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견해와 유사하며, 미국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은 어떤가, 지금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모든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하고, 중국에 가면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양쪽 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미국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협상다운 협상을 해보고, 북한이 정말 거기에서도 기만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충분한 응징을 하겠다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지금까지 미국은 한번도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작년 6월에 열렸던 3차 6자회담에서 낸 제안도 사실상 미국 자체의 전향적이고 능동적인 제안이라기 보다는 한국 정부의 안을 많이 수용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경우도 만약 미국이 정말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그래서 협상다운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협상 단계에서

북한이 거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중국도 얼마든지 미국하고 노선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국이 그런 협상다운 협상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북 핵을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뭔가 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고 거기에 중국, 한국, 러시아가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조장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이재정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 동북아시아 평화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중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도 어찌 보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현재 미국의 정책은 일본과 함께 결국 중일관계를 더 긴장관계로 끌고 가는 의도가 그 이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의 대중정책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과연 어떻게 대중정책을 펴 나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 또는 전략적 목적 달성에 치중하여 과연 북핵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됨

두 번째 질문은 제네바 협정 이후에 냉정하게 바라본다고 하면 정말 북이 얻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5년 동안에 결산을 해본다면 정말 북이 얻은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냉정하게 본다고 할 때 북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태도, 오늘의 미국에 대한 양자 협상을 통한 어떤 결정적인 대답을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북의 입장에는 어찌면 미국으로부터 일종의 기만이나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 나가서 결국 북 핵문제를

정말 미국 부시정부나 과거 클린턴 정부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해결할 의도는 있는 것인가, 부시 정부가 결국 미국의 국익 내지는 동북아시아의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 관계 악화는 중국의 국력 급신장에 따른 경계심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문정인 동북아시아 위원장) 우리 이재정 부의장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국의 대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린턴 행정부 때는 사실상 그 당시 때만 해도 제팬 패싱, 일본은 지나쳐 버리고 중국하고만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중관계가 상당히 좋았고요. 지금은 완전 역이죠. 중국은 완전히 제껴버리고, 미일 관계가 좋아지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배후에는 사실상 중국 위험론이라는 게 깔려있죠.

중국 위험론 이라는 것은 우리 국제정치 이론에서 얘기하는 세력 전이 이론(power transition theory)과 관련 있습니다. 그것은 패권국의 국력 신장의 속도는 둔화되고 도전국의 국력신장의 속도가 빨라졌을 때 결국에 도전국이 패권국의 꼬리를 밟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지금 미국에서 대중정책을 짜거나 아시아 정책을 짜는 사람들은 이 세력 전이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미 관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아닌 한중일 3국간 균형자 역할을 의미함

그런 점에서 중국을 위협으로 보고 중국 위협을 다스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일본과의 강한 동맹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목은 최근에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균형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주장한 동북아 균형론은 미중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만약 모든 언론에서 미중관계 대립에서 한국이 중국 쪽에 붙어서 세력 판

도를 바꿀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요지는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떨어질 내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인데,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그렇게 나쁘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 번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 중간의 관계를 개선되게 하는데 중재역할도 하고 균형자 역할도 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완전 19세기 말 구라파에서 영국이 했던 균형자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제는 그렇고요.

북핵 문제 관련 북한의 요구 사항은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 기조 포기, 상호 주권 존중 그리고 내정 간섭 지양 의 3가지 임

사실 북한이 미국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떻게 보면 여기서 미국이 상당히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정책을 포기해 달라. 둘째는 서로의 주권에 대해서 상호 존중해 주자. 셋째는 내정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 세 가지는 1992년에 김용순-아놀드 켄터, 94년의 제네바 기본 합의, 2000년 10월 12일 조명록-올브라이트의 공동성명에 전부 다 들어가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시 행정부 출범하면서 과거 정부들이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천명 해달라는 것인데, 미국에서 그것을 안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북한의 외교정책에는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의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고 협상의 상대로서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충분히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가령 북한의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체제보장으로, 그래서 체제의 안전보장성을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적대정책 없애고, 우리에게 대해서 주권 인정해주고, 내

정 간섭하지 말자. 그리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자는 것인데, 조 바이든 상원의원은 그것을 해주자 이거예요. 지금 루가 상원위원 같은 사람들도 그래서 만약 그것이 결국 상호불가침의 중요한 여건들이라고 하면, 불가침 조약은 못 하겠지만, 미 상하 양원에서 소위, 결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부시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작년 2월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부시 행정부도 보다 유연한 태도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해법이 이
미 6자회담을 통해
제시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행이 지연
되는 것은 북미간상
호 불신 때문임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진정한 협력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위원장님도 결과적으로 핵 문제도 결국 북미간의 신뢰문제다. 국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결국 진실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진솔한 어떤 입장들을 정리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해답은 제3차 6자회담에서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믿지를 못하니까, 한 쪽은 동시에 이행하자, 한 쪽은 네가 먼저하고 난 다음에 하자, 뭐 이런 문제로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확대하면 우리가 동북아의 협력, 지역협력 이게 왜 안 되느냐, 아시겠지만 유럽은 EU가 되었고 아시아, 아프리카는 OAU가 있고 남미, 북미는 OAS해서 지역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가 이게 너무 넓고 문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되기는 힘들어도 역시 동북아의 협력이 제대로 될 때에 아시아가 협력이 제대로 된다고 본다면 이 동북아 지역 협력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이나, 저는

한반도 분단 문제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큰 장애물이지만, 한편으로는 분단의 원인이 주변 국가에도 있음

뛰니 뛰니 해도 한반도 분단이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분단에 문제가 생기면 본의 아니게 어느 쪽도 한편을 들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안보의 문제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단의 원인을 보면, 우리 자생, 내생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주변 국가들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21세기가 넘기 전에 우선은 한반도의 분단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분단을 가져오는 데는 주변국들이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협력을 받고 또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되지만, 최소한도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가? 통일을 원하는가?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북아 지역내에서 균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수적임

한편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저는 결과적으로 역시 3개국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역사 인식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후세들이라도 또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정확하게 동북아에 있어서의 과거의 역사로부터 쪽 어떻게 흘러왔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1905년 가쓰라-태프트 조약이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첫 단추가 잘못 잠겨졌기 때문에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우리 한국은 교전국가도 아닌 전승국가도 아닌 그냥 어물정한 기타 전쟁으로 피해를 본 국가로 거쳤기 때문에 65년 한일협정이라는 또 잘못된 협정이, 그렇게 어물정하게 끝나버렸고, 그런 것이 96년 신한일 어업협

정, 신한일 협정으로 쪽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북아 중심의 진정한 협력을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한 데 모여 역사 인식에 대한 올바른 공유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느낌을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 21세기 생존을 위해 동북아 문제를 인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

(이상만 중앙대학교 교수) 동북아라는 것은 21세기의 우리민족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생존 전략 같으면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포럼에 과제가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고 등 모든 문제를 제로베이스를 놓고 평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1995년도의 관점이 아니고, 2004년도 3월 31일의 관점에서 한번 제로베이스를 놓고, 첫째,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어차피 상대적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 때문에 자꾸 5년 전의 관점을 갖고 더 나아가서 백 년 전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 이것이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일 양국의 대응은 과거 역사적 관점에 치우친 대응이며 이로 인해 양국간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다음은 일본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외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신문에 나가면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만, 독도 문제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외국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15,000달러 소득국가에 맞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850불정도 수준의 대응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손가락 이야기나 분신 같은 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외부 사람이 보면 CNN TV에서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것이 만불 나라 국가들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 문제도, 사실은 작년만 해도 작년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한국이 균형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재해석이 필요함

도 아니죠. 3개월만 해도 겨울연가 드라마를 보고, 저도 '겨울연가' 토요일마다 봤습니다만, 진짜 한일 긴장관계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터져 버리면서 갑자기 제2의 6.25 사변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급변하면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학생들에게 잘못 얘기하면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젊은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잘해봐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정확하게 2004년도 3월 31일에 한일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한 번 제로베이스를 놓고, 우리가 한번 평가 해보고 해서, 이런 하나의 객관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가 21세기 생존의 투쟁인 동북아의 경영전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정인 동북아시아 위원장께서 핵문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해부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중국을 철두철미하게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별 객관적인 해부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문 위원장께서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주최측에서도 한 2-3년 정도 씩름해야 될 아젠다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 국제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정체성 측면이 부각되고 있어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들이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키치고 있음

(문정인 동북아시아 위원장) 우리 이상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거없이 현재는 없고, 지금에 대한 분석 없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이라고 하는 파워를 가지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 이익을 가지고 보는 시각도 있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국제정치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들을 민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어서 나오느냐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동북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적 기억, 그런 집단적 기억들이 어떻게 소위, 집단 행태로 또는 배타적 민족주의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들이 어떻게 또 국가 간에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는가 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게 현재와 미래의 우리 행태를 결정짓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변수, 그것에 영향을 주는 과거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영선 연세대 교수) 오늘 문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아주 잘 해주셔서 아주 좋은 그런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세 가지 시나리오가 결국 문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해결 과제와 연결된 중요한 전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역시 우리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나리오가 세 개가 가지고 있는 확률적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위원장님의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결국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의 방향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국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뭐 그거는 미국의 국내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머리에 두고 계실 텐데, 정확히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정인 동북아시대 위원장) 참여정부의 판단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외교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내부적으로 다양한 전망들이 혼재해 있으며 주변국들도 각기 처한 여건에 따라 전략적 입장에 차이가 있음

정책, 그리고 북한정책을 하는 핵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부 쪽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자고 하는 반면 NSC를 포함해서 특히 네오콘을 형성하고 있는 쪽에서는 협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군사 행동도 안 하고, 그래서 장기화 되는 방법, 그러면서 북한을 고립 봉쇄해서 체제 전환을 시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는 그 쪽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한국, 중국, 러시아 이쪽은 분명히 협상을 통한 타결을 상당히 강력히 원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통한 타결과 그 다음에 중·장기화 사이에서 생겨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황이 좀 악화되면 제3의 경로, 위기의 경로로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는 협상의 타결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가장 부담이 되는 시나리오라고 판단됨

우리 1994년의 사례를 회고해 볼 때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본질을 정말 위기 상황에서 파악한다고 하면 협상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점에서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불리한 것은 어쩌면 두 번째 옵션인 것 같고, 첫 번째가 제일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그렇게 불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위기 국면에서 우선 미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거기에서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 우선 해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니까요. 두 번째로 장기화되면 어려움이 많다고 봐집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지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운 점은 동북아 지역의 패권싸움이라는 큰 틀 속에서 여러 국가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경쟁하며 협력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미국은 중국보고 해라, 중국은 미국보고 해라, 하는 식으로만 말씀하셨을 때, 우리 큰 틀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네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 했을 때 중국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또 미국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주로 일본 책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너희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에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친중권이 생기더라도 용인하겠다. 그 대신 너는 양안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 뭐 그런 협상 같은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큰 틀 속에서 우리 북핵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전략적 수단 이 부족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따를 것으로 보임

또 이것과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한국이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주도적 역할을 할 어떤 수단과 전략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어떤 수단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남북의 민간 경협을 더 확대해서 다음에 정치적 문제 해결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런 자신감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 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문정인 동북아시아 위원장) 김중웅 회장님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정부로서도 아마 가장 어려운 입장일 겁니다. 이 문제 특히 후반부의 문제 같은 경우 참여정부는 주도적으로 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성공단 진출할 때만 해도 제가 미국에 주로 있었습디만, 워싱턴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15개 시범 사업자들이지만, 반전을 가져와서 사업이 성사되게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전반적인 6자회담의 기본적인 구조적 세팅으로 보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아젠다 세팅을 할 때는 한국 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특히 3차 6자회담 같은 곳에서 완전히 아젠다를 만들고,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만든 것도 한국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할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게임의 구조로 보서는 우리 한국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북한이 우리와 함께 전체 민족을 살리는 입장에서 남과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주도적 역할, 우리의 전향적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데 아직 그러지 못한 상황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북아 전반에 대한 문제와 북핵 문제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다소 근거가 희박한 의견이라고 생각됨

그 다음에 북핵 문제하고 동북아 전체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 4월에 딕 체니 부통령이 북경 갔을 때, 결국 그 때 양안 문제하고 북핵 문제를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중국은 그것을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안 문제하고 북핵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미국, 특히 일본에서 소위 떠도는 풍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 같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연계설에 대해서는 완전히 냉담하고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은 모든 국가들에게 결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저는 6자회담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 심지어 북한까지도 북한 핵무기의 폐기라고 하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에서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입장을 많이 바꿔야겠지만, 미국이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나온다고 하면, 사태는 상당히 반전될 수 있

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국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과제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 90년대 초와 똑같이 북핵하고 남북경협을 연계시킬 것이냐, 비연계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내부적 논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상황은 오지 않았고, 지금 거의 육박하는 겁니다만, 이 상황은 결국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도 봐야 될 것이고, 내부적인 토론도 많이 거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북핵 및 동북아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패권주의 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김종구 중앙일보 연구위원) 북미 양자 협상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려는 것이 미국의 강력한 입장인데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 협상을 병행해서 하거나 아니면 우선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층을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도 반신반의한 부분이 크다는 점입니다. 제가 포럼 참석하고 여러 군데 많이 좀 듣고 종합해본 결과는 미국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략적으로 전 세계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패권 추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굴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굴복을 받거나 아니면 이것을 끌고 가야합니다.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적절히 계속 위협하고 다루고 어르고 하면서 공격할 여지를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가 바로 패권 추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특히 시민사회 포럼에 나가보면, 양식 있는 분들조차도 이런 측면에서 특히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진

정한 의도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경직된 면이 있었지만 최근 6자 회담이 성사된 이후 미국도 상당히 유연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고 있음

(문정인 동북아시아 위원장) 우선 북미평화 협정은 요새 많 이 거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소위 양자 서면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자고 주장한 이후부터는 북미평화협정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걱정 되는 것은 북미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불가침 조약을 맺을 때는 이것이 평화협정 체제로 들어가면서 결국에 주한미군철수의 어떤 전제가 될 거 아니냐는 걱정을 서울대 하영선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양자 협상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6자 회담만 나오면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유연한 협상이 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과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대표들이 북 대표보다 더 경직되었거든요. 양자 세팅이 되면 미국 사람들이 피 해버렸어요. 3자 회담을 해도 안 만나려고 하고, 6자 회담에서 만 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분명히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여간 6자 회담만 오게 되면 어떤 아젠다도 토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양자, 삼자, 미국도 바로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도덕적 절대주의, 패권적 일방주의 및 공세적 현실주의를 주창하고 있음

그 다음은 미국의 의도 문제인데요 부시 독트린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시 독트린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우선 순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살상 무기하고 국제 테러리즘이라는 것, 두 번째는 미국의 도덕적 절대주의, 미국적 가치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 그러니까 자유의 확산, 민주주의의 확산, 미국적 가치의 확산 등이 대표적인 것이지요. 셋째

미국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들에 한해서 주권을 인정하고 이것이 최근 미국 외교의 큰 틀임

는 패권적 일방주의가 되겠죠. 지금 사실상 전 세계는 미국의 패권을 존중합니다. 패권이라는 말 자체가 한 국가의 한 행위자의 모든 힘이 집중되는 것을 패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과 경합할 수 있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패권은 있는 것인데, 그 패권이 아주 일방주의적으로 나오죠. 마지막으로 있는 게 공세적 현실주의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이 우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위협을 가할 의도가 있다는 게 파악이 되면 선제 공격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술 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억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전술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벙커버스트라고 해서 지하에는 요격하는 소위, 그런 전술 핵탄두 개발하는 문제라던가, 그리고 우리가 1648년 웨스트 팔리아스 시스템에 의하면 모든 국가의 주권은 신성 불가침인데 지금 부시 독트린 같은 시각에서 보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들, 즉 주권이 존중될만한 행위를 하는 국가의 주권만 존중 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안하는 경우에는 쳐들어가서 결국 없앨 수도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런 일련의 것들이 결국은 미국 외교 정책에 큰 패라다임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많은 반대와 저항을 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하는 것이 의도냐, 아니면 그 체제를 고립 봉쇄해서 전환을 시켜 체제 전환을 통한 북핵 문제의 영구적 해결의 역점을 두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일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패권이 존재한다는 말은 우리 북핵 문제 해결이 기본적인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부가 서더라도 대량 살상무기 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절대 양보를 안 할 것이라는 점이죠. 민주주의 정부가

미국이 강경 외교 노선을 견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 있어서 실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서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설득시켜 나갈 필요는 분명히 있겠지요. 미국식의 강경 정책이 궁극적으로 북핵 해결 또는 북의 체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물음에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이거든요.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오는 외압의 경우는 북의 체제 정통성을 강화시켜주고, 군부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 북한 인민의 내적 응집력을 강화시켜 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일반적 시각입니다. 따라서 신속하면서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 속에 하나의 정책에 부분적인 선회를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실마리를 풀어보는 방안도 고려할 만한 정책 수단임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 우선 북핵 문제가 풀려야 한반도 평화, 안정도 도모하고 나가서 동북아 평화 번영의 바탕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를 푸는 방법, 으로서 정상회담, 이를 통해서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당사자간의 긴장관계가 있을 때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우 바로 이때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그런 지혜를 한 번 짚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상회담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북아 평화번영 미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정, 안정된 기반이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정을 해치는,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도 그런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중국보다 제가 볼 때는 일본이 패권주의 추구, 과거의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 이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대일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을사조약 체결 100년, 광복 60년, 그리고 한일관계가 정상화 된지 4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계기에 한일관계를 재조명하고 재정립을 하지 않으면 동북아 평화 변영의 안정적 기반 마련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한일관계의 재조명과 그야말로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의 재정립에 대해 참여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어떤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유연한 자세로 북한측과 만남을 가질 용의가 있음

(문정인 동북아시아 위원장) 예.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미 밝히셨으니까, 하여간 어떤 6자 회담과 소위 조율되는 조건 하에서라면 어떤 형태의 접촉도 북측하고 갖겠다. 이것은 북측의 문제지 우리측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측은 정상회담 할 용의가 있고, 그러나 과거처럼 이렇게 과거의 정상회담 같은 방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 건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투명하게 남북 당국자 회담에서 논의가 되고 그래서 그런데서 하는 조건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지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전에 사전조율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6자회담의 기본 틀하고 잘 연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 한일관계는 지금 강만길 전 상지대 총장께서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을 연장하시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관계 재정립 문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획단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여정부 수준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역사 재평가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RI**